

4년 간 표류 완도-제주간 해저송전선로 사업 '물꼬'



완도-제주간 해저 송전선로 조감도

주민 반대로 4년 동안 난항을 겪던 전남 완도-제주간 해저송전선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1일 완도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완도읍 도암리 주민들이 한전변환소 유치 동의를 한전에 제출했다.

완도도암리 주민들 변환소 유치 동의서 제출

122km 해저전력케이블 연결 제주 전력난 해소

도암리 주민들은 지난 5월27일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43세대 중 31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변전소 유치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해 완도군에 건설하려던 변환소와 송전탑 공사가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완도-제주간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육지측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도와 제주 사이를 해저송전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완도군에 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을 세우는 공사이다.

완도변환소 용량은 HVDC 200MW규모이

며, 사업지는 완도읍 일대 약 9000평이다. 한전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주민설명회를 연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인 대가용리 마을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거절하는 등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을 반대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제주의 전력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한전은 완도 전력난 수급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주민설명회는 취소됐고 완도지역에서는 범군민대책위가 결성돼 적극 저지활동을 펼쳤다. 한전은 완도읍의 망석리와 사정리, 도암

리 등을 후보지역으로 정하고 주민설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완도군을 방문해 대책사업임을 밝히고 한전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공문을 완도군에 발송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이던 도암리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함으로써 큰 충동이나 갈등없이 완도-제주간 해저송전선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한전은 도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설명한 뒤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끝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사업 승인이 나면 한전은 변환소 부지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완도-제주 간 제3연계선은 일명 'HVDC(high-voltage, direct current)'라고 불리는 초고압직류송전선을 이용하는 전력선이다. 완도에서 제주까지, 약 122km를 잇는 해저전력케이블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전남형 긴급생활비, 36만 가구에 1200억 지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당초 지원계획 대비 4만여 가구가 증가한 36만여 가구에 집계돼 모두 1200억 원이 지원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약 5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를 신청했다. 이는 당초 예상 대비 약

마감일 기준 54만 가구 신청

당초 계획대비 4만가구 초과

현재 6만여 가구 조사 진행중

"이의신청 의견 적극 반영"

17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중 32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6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된 32만 가구 대비 4만여 가구 늘어난 36만여 가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이 증가한 것은 도민 의견을 수렴, 기준일을 확대하고 고령 어르신을 위

한 방문 접수, 상품권 지급 등 민원에 대응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는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 18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우편으로 긴급생활비지원 제외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안내했다.

사업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가구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지원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 848가구 중 653가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 대비 77%의 가구를 구제했다.

안병욱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마무리 됐다"면서 "지원기준을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정해 제외된 가구가 많았으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남도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사업이다.

김정환 기자

강진 신마항에 제주 오가는 '대형 화물선 재입항' 추진

어촌계 보상완료 후 4천톤급 2척 투입 9월 운항... 80억 경제효과



강진 신마항

강진군 마량면 신마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의 재입항이 추진되고 있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4000톤급 화물선 2척을 보유한 ㈜제마해운은 최근 장흥, 완도 등 인근 지역 어촌계와 협의를 갖고 9월부터 제주-강진을 오가는 화물선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제마해운의 화물선은 컨테이너 32개를 실을 수 있으며, 이는 25톤 화물차 70~80대 분량이다.

주요 운송화물로는 제주 산다수 생수와 밀감, 김장무 등을 육지로 나르고 건축자

재 등의 공산품을 신마항을 통해 제주로 이동시킨다.

당초 강진군은 지난 2016년 화물선사 유치를 추진, (주)제마해운과 2017년 9월 MOU를 체결하고 그해 10월8일 화물선을 운항했다.

당시 하루 평균 25톤 화물차 70대 분량이 드나들며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았다.

하지만 항로에 위치한 장흥과 완도 어촌계에서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며 운항을 반대해 취항 20일만인 2017년 10월27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강진군은 양식장 시설 확인과 항로 주변 시설물 정비, 어민설명회를 갖는 등 화물선 운항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장흥과 완도지역 어촌계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어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선사에서는 사전 피해 보상을 실시하도록 설득에 나섰다.

결국 최근에는 완도 고금면과 약산면 어촌계는 양식장 보상이 이뤄지면 화물선 취항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흥군 대덕면 내저 어촌계 또한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와 어촌계의 보상이 완료되면 전남도와 강진군은 유류대 지원명목으로 선사에게 손실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강진군은 화물선 취항에 대비해 신마항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을 7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이 본격 취항하면 강진은 해상으로부터 시작된 물류가 육상, 배후단지로 이어지면서 SOC 확충, 숙박, 음식점, 주유소, 일반 상가로까지 파급 효과가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직접 파급효과는 접안료 등 항만사용료와 상시고용, 임시고용 등 지역민 채용에 따른 연간 9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또한 간접효과는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25톤 기준 화물트럭 통행량 기준 성수기와 비수기를 합친 후 평균치를 내면 하루 120대가 화물을 선적, 적하하고 화물차 기사들의 숙박과 식비, 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연간 8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